

‘日 오염수 방류’ 무관심 도의원 눈총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日 수산물 수입 중단 건의안 채택 “일부 의원들 수산물 주산지 최대 현안 외면” 목소리

전남은 국내 최대 수산지다. 수산물 생산액(지난해 기준 3조 907억원)이 전국의 38%로 1위, 생산량(186만 5000 t)도 전국의 58%로 1위다. 어가수(1만 5723가구)도 전국 37%로 가장 많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3만 4620명)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이유다. 전남도의회가 11일 제 373회 임시회에서 이광일(민주·여수 1) 의원 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당 건의안을 발의하는데 참여하지 않거나 채택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쏟아진다.

우선, 국민의 힘 소속 전서현(비례)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건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시할 경우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만큼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뿐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골자다. 전 의원은 그러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는 찬성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1명의 전체 의원 중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

의 경우 애초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다.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의 참여 여부를 문자로 물었는데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 위원회에서조차 신의준(민주·완도 2) 위원장과 한춘욱(민주·순천 2), 정길수(민주·무안 1), 진호건(민주·곡성)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을 비롯, 참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역 구 일정도 많고 다른 문자도 많이 와 지나쳤다, 문자를 늦게 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지역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관심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건의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400억 골목상권 특례보증 시행

1년간 대출금리 3~4% 지원...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대출

광주시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해소를 위해 하반기 400억원의 경영자금 융자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상반기에 1000억원의 골목상권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발행하는 등 올해 총 14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하반기 400억원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27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 협약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로 9개 기관이다.

광주시는 또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를 지원한다. 신

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이자 4%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기간은 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왼쪽 세번째) 전남지사와 한동훈(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법무부와 전라남도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남도내 조선업 종사자 외국인 이민제도 개선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전남도를 방문했다. <전남도제공>

전남산 흑염소 전국 식탁 오른다

이번달부터 대형 유통업체 공급...농가 소득향상 기대

정정 전남에서 건강하게 길러낸 흑염소가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가공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전국 단위로 공급을 시작한다.

흑염소의 대량 유통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유통 기반 시설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흑염소 고기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주변 확대로 전남지역 흑염소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흑염소 고기는 강진에 있는 ㈜가온축산-유통이 공급한다. 지난달 홈플러스와 위생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남산 흑염소 고기 가공-유통 계약을 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흑염소 고기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소비

형태도 탕 위주에서 구이, 수육, 불고기로 바뀌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국적인 유통-판매망이 없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전남 흑염소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흑염소 생산 기반 확충, 생산성 향상,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남지역 흑염소 사육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흑염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완만한 산지, 넓은 농경지, 우수한 조사료 자원을 활용해 전국 흑염소 44만 마리의 25%인 11만 마리를 사육하는 흑염소 주산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전남도의회, 지방의회 첫 ESG 실천 조례 제정

차영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ESG 실천 조례를 만든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 373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영수(민주·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주요 기준이다.

차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의회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조

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SG 실천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 분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남도청을 비롯한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나 지방의회로서는 전남도의회가 최초다.

전남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1회용품 안쓰기를 비롯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청사 전체 소등의 날 운영, 복지기동대 활동 등 21가지 지표를 설정해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차 의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더욱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이의 실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동훈 장관 만난 김영록 지사 “이민제 도입 필요”

도청서 회동... ‘지방 소멸 방지’ 고용허가제·이민청 설립 등 제안

전남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외국인 이민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 중심의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

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달라는 건의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각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남도와 상호중공업 방문해 수요 물량이 많음에도, 용접 인력이 없어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어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록 지사님과 저도 그 한마음으로, 그 선의로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